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보도	2018.6.25.(월) 10시 30분 이후	배포	2018.6.25(월)	
책임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담당자	윤덕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은진 사무관 (02-2100-2836)	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기한(02-2100-2990)		양병권 사무관 (02-2100-2992)	
	금융위 보험과장 하주식(02-2100-2960)		현지은 사무관 (02-2100-2964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진석(02-3145-8020)		김부곤 팀장 (02-3145-8040)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태경(02-3145-6770)		박형근 팀장 (02-3145-6773)	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동궁(02-3145-7550)		정용걸 팀장 (02-3145-7447)	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진호(02-3145-8070)		이길성 팀장 (02-3145-8072)	

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」 개최

1 회의 개요

- 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'18.6.25(월)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」를 개최하여,
-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,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

[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]

- (일시 / 장소) '18.6.25(금) 10:30~11:3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(16층)
- (참석) 21명
 - 금융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중소기업장, 금정과장, 시장분석과장
 - 금감원 부원장, 은행·저축은행·여전·상호금융감독국장
 - 은행연합회 전무, 여신금융협회장, 저축은행중앙회장, 상호금융권 신용부문(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) 담당이사
 -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은행 은행장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,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

○ 이에 따라, 가계부채 증가율* 둔화, 고정금리, 분할상환비중**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

* 가계신용증가율(% , 한국은행) : ('15) 10.9 ('16) 11.6 ('17) 8.1

** ('13) 18.7% → ('17) 49.8% ** ('13) 15.9% → ('17) 44.5% <은행권 주담대 기준>

□ 다만,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,

○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 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,

○ 신용대출,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,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

['18년 리스크 요인]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, 올해 하반기에는 ❶신용대출, ❷전세 자금대출, 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

❶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,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

-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*,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,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

* 신용대출 증가액(조원, '18.1~5월) : (쏜은행권) 4.6 vs. (인터넷은행) 1.7

- 특히, 신용대출은 은행-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,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어,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

②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(+3.6조원)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+8.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(+8.4조원)의 약 97%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

* 은행권 전세대출잔액(조원, 금감원) : ('14)35.0 ('15)41.2 ('16)51.5 ('17)65.9 ('18.4월)74.0

-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 대출,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
-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, 임대가구 재무상황* 등을 감안시,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

* 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% 초과가구(% 한은): 다주택 임대가구 0.3, 1주택 임대가구 0.8

- 다만, 전세가격 급락시,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*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

* 전세가격 20% 급락(외환위기 당시 기준)시 7.1%의 임대가가구가 임대 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(韓銀, '18.6월)

③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

-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*가 여전히 빠르고,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

* 업권별 증가율(% , '17년) : (은행) 10.6 (상호금융) 59.2, (저축은행) 35.1

-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·보증대출비중(약 82%)이 높고,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,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
- 음식·도소매업, 제조업,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

[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]

①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, 가계대출 업권·유형별 편셋형 대응을 강화

- ❶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
- ❷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 하되,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* 가입을 유도

*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(예 : HUG, 서울보증보험 등)이 책임지는 상품

- ❸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*을 도입**하고,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,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

*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,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(RTI) 도입 등

** 상호금융 7월, 여전사·저축은행 10월 도입 예정

- 특히,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,
-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

②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

- ❶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,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·환급할 것을 촉구
- 또한,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,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 요구

➡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, 은행연,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

②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·출시

③ 기존 세일엔리스백*(SLB)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엔리스백 프로그램 마련

* (예)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→ 임대 거주 → 5년후 재매입 가능

③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

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, DSR,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

- 특히,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

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

③ '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출 규제*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

* 가계대출 예대출 가중치는 상향(+15%),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(△15%),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(0%) 유지

④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, DSR의 형식적 운영,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

-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,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

- ◇ 정부는 '11년 최초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인 「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」 발표 이후,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
-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,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여 일정한 성과 달성
 - 최근의 대책들은 소득증진,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요인 개선과 서민·취약차주 지원 등을 강조

①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('11.6.29)

-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가계대출의 구조개선* 추진 등

* 은행권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'16년까지 30%로 확대

②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('12.2.27)

-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* 및 건전성 강화** 추진 등

*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,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등

** 고위험대출 규제·감독 강화,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

③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('14.2.27)

- 고정금리, 비거치식·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 개선* 등

*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신규 설정(보험, 상호금융)

④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('14.12.10)

- 과도한 수신 억제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

*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추진,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도입 등

⑤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('15.2.26)

-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(안심전환대출)을 통해 충량을 늘리지 않고 장기·고정금리·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

⑥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('15.7.22)

- 가계소득 증대, 부채의 안정적 관리, 서민·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

- 담보인정 한도 기준 강화 등 제2금융권 토지·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
⑦ 여신(주택담보대출)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('15.12.14.)

- '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,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' 선진 여신관행 정착 유도(은행권)

⑧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방안 발표('16.3.25.)

- 연령별·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공급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'부채를 감축'하고 '노후 보장'과 '주거 안정'도 지원

⑨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('16.8.25)

-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및 집단대출, 비은행, 서민·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

⑩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('17.10.24)

-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

*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,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, 구조적 대응 등 3대 목표 제시

⑪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('17.11.27)

- 여신심사시 차주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新DTI, DSR을 도입하고,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

⑫ 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('18.1.18)

- 금리상승기 이자부담 증가 등 상대적으로 영향을 먼저 받게 되는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

* 원금상환유예(최대 3년), 연체금리인하(약정금리+최대 3%p), 담보권실행 유예(1년)

⑬ '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('18.4.16)

-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,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등

⑭ 서민·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('18.4.24)

- 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도입, 비소구정책모기지 확대 등